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은 사회복지를 설명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다. 이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베리치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를 설명하며 제시된 개념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애 전반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8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돌봄 방식만으로는 노인과 취약 계층의 삶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통합 돌봄이다. 통합 돌봄은 건강, 의료, 요양, 생활 지원, 사회복지,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례관리 중심의 돌봄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 서비스와 구별된다. 특히 건강과 의료 영역에서 통합 돌봄은 병원 중심 처

지역 중심이 돼야 하는 통합 돌봄

료를 넘어선다.

방문 간호, 재활 치료, 약물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예방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식사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돌봄은 국가 정책의 영역이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 돌봄은 사회복지와 생활 지원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적 지원, 상담, 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은 이용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요소다.

특히 통합 돌봄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등이 협력해 이용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돌봄이 가능해진다.

통합 돌봄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 예산과 인력 부족, 지역 간 자원의 불균형 등은 통

합 돌봄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민간 자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적 관계 형성, 문화 활동 참여, 정서적 지원과 같은 영역은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 돌봄은 무엇보다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시와 농촌, 어촌과 산촌은 각각 인구 구조, 생활 환경, 사회적 자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돌봄 체계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체계가 구축될 때, 통합 돌봄은 비로소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의 공간이 아니라, 돌봄이 실현되는 생활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합 돌봄 역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돌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이다. 통합 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집합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통합 돌봄은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로컬 중심의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돌봄의 공백을 줄이고, 이용자가 삶의 터전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통합 돌봄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방향일 것이다.

기고

전종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이 정책은 과연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까?” 수많은 정책변화와 제도 개선의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늘 마음에 남았던 질문이다.

병무행정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행정이지만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이다.

병역의무는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책무로 그 이행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되고 공감될 때 비로소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된다.

그동안 병무청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공정한 병역,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목표로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 병무행정은 국민을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민원 불편과 개선 아이디어는 대부분 현장에 있고, 국민의 일상 속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충분하지 하는 점이다. 그 해답의 하나가 바로 쌍방향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국민제안 활성화에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정책, 소통·참여로 완성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제안제도는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안제도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다.

이는 국민과 공무원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고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행정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병무행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 학부모, 기업, 복무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험과 개선 의견은 소중한 정책 자산이며 제안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접근하기 쉬운 참여 플랫폼으로 병무정책에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제안활성화는 국민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제안과 더불어 공무원 내부의 제안 문화 정착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은 제도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집단이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공유될 때 제안문화는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제안이 존중받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반영되는 경험이 축적될 때 조직 전반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부서 간, 직급 간 경계를 허무는 제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시각이 교차될 때 정책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지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원응대는 보다 친절해질 것이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병무청의 이미지를 바꾸고, 병무정책을 더 따뜻하고 더 공정하며 더 신뢰받는 행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병무정책을 바꾼다.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정책,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참여로 완성되는 열린 병무행정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제안제도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지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병무행정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병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 등 국민 제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접속한 뒤 국민제안-일반제안신청-제안작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들어가 국민 참여 마당-국민 제안 마당-제안신청-신청서 작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취재수첩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금이 적기

송대영

사회부 차장대우



‘오월의 꽃, 오늘의 빛’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의 슬로건이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이들을 기리고, 그날의 용기와 연대를 오늘의 광장으로 잇겠다는 뜻이 담겼다.

해마다 5·18기념제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기념식은 물론 연구·교육, 국내외 연대 사업, 5·18정신 계승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발표 명령자와 구체적 발표 경위, 암매장 의혹, 학살 책임자에 대한 법적·역사적 책임 규명 등은 현재진행형이다. 50주년이 가까워질수록 1980년 5월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는 늘어나고, 기억은 점차 역사 속으로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월은 다양한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의 참상을 문학으로 증언했고, 전일빌딩 245와 옛 전남도청 복원은 현장을 기억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왜곡과 폄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허위 주장과 부정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희생자

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현재 5·18기념제단이 법률 대응 중인 사건은 형사·민사를 포함해 26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일부 출판물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도 왜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 여전히 현재형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이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 이념을 선언하는 공간이다. 여기에 오월의 민주·인권·평화·정의의 가치를 담는다면, 이는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선언이 된다. 역사 왜곡의 여지를 좁히고,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설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1980년 5월과 맞닿아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시민의 힘이 나라를 바로 세웠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오월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공식화할 적기다.

사설

민주 통합시장 경선, 롤 보단 공정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 경선 롤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통합시장 공천 방식으로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8인의 후보를 5인으로 압축한 뒤 이 방식으로 본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도입 여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 제도는 배심원단이 후보 적격자를 가리는 속의형 경선 모델의 하나로 기존 여론조사·당원투표 중심 경선이 조직력·인지도 경쟁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현직 유권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합동면담 등 속의 절차를 진행한 뒤 투표 또는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거나 선출에 일정 비율로 반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 공천위의 이번 결정은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갈등 최소화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시도 통합 효과 반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40년 동안 광주·전남이 분리된 탓에 상대 지역 정치인 정보가 부족한데다 유권자·권리당원 수도 광주는 120만명과 13만명인데 비해 전남은 156만명, 18만명으로 격차가 커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배심원제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컨센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배심원 구성에 투명·공정성, 보안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공천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실제로 2010년 ‘배심원단 평가’와 ‘전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많은 부작용을 노출했다.

배심원단 평가에서 3명의 후보중 3위를 차지한 강운태 후보가 전 당원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당심과 배심원단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 매수 의혹과 명단 유출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선거 내내 극심한 경선 후유증까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심원단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여기에 정교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경선에 있어 톨보다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성화로 부활, 전남 작은학교 ‘눈에 띈다’

입학생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다. 교육부의 ‘2026년 입학예정자 0명 초등학교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입학생이 없는 초교는 전국에 210곳인데 이 중 전남이 45곳으로 전국 최다치를 보이고 있다. 이어 경북 38곳, 전북 23곳, 충북 21곳, 충남·강원 20곳 등의 순이다.

광주도 광주중앙초교와 삼도초교 등 2곳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폐교 위기’의 전남 작은 학교들이 ‘특색 있는 교육’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부활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가 바로 그 케이스다.

이는 지역 특성과 학교 강점을 결합해 학교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폐교 위기에 처한 전남 지역 작은 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성장시키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초교 7곳 중 4곳의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다. 나머지 3개교도 학생 수 감소 추세가 멈추고 있다.

지역 특성과 학교의 강점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과 세심한 돌봄, 학교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바다와 항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 중심 해양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목포 서산초교의 경우 2024년 32명에서 불과했던 전교생이 2025년 52명, 올해는 80명으로 늘었다. 또 학생 개별 맞춤형 균형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광 근남초교도 학생 수가 2024년 3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 지정돼 영화를 주제로 한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화순 청풍초교도 학생 수가 지난해 23명에서 올해 30명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학급 수가 5학급에서 6학급으로 늘었고 병설유치원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처럼 ‘차별화된 교육’을 하는 작은학교가 큰 호응을 얻자 올해 7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특성화모델 초교를 14개교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중점을 둔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작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의 거점 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